

정부는 21만 국민의 청원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

강은경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GMO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GMO가 안전하다고 절대 확신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매년 약 200만 톤의 식용 GMO를 포함해 약 1,000만 톤이 넘는 GMO를 수입하고 있다. 동물이 먹는 사료에도 있는 GMO 표시가 사람이 먹는 식품에는 GMO 표시가 단 1건도 없다.

결국으로는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행 표시제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대다수의 식용유와 간장, 된장, 고추장, 특히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와 음료에 포함된 액상과당은 대부분 수입산 GMO 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GMO 표시제는 2차 가공식품에 GMO 단백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면 GMO 표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면제 조항 때문에 현행 GMO 표시제는 커다란 구멍이 나 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GMO 식품을 먹고 있다.

더 이상 유명무실한 GMO 표시제로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유린하지 말라!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어떤 식품이라도 예외 없이 GMO 표기를 해야 한다.

현행 표시제도는 GMO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 Non-GMO 표시를 하면 불법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과 같다.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하게 하는 것이 왜 불법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기업 위주, 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위한 정책, GMO 완전표시제를 즉각 도입하기 바란다. 짧은 기간 진행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명 이상의 국민이 요구했다. 국민의 뜻을 알았다면, 더 이상 기업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제대로 된 GMO 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

국민들은 GMO가 포함된 식품인지 아닌지 정확히 표시하길 요구하고 있으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GMO 식품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 최소한 아이들을 위한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에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에게 GMO의 문제점을 알리는 식생활 교육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정부와 식약처는 이번 국민청원에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 소통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하라!

학교급식, 공공급식에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하라!

NON-GMO표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현행 식약처 고시를 개정하라!